

“박 퇴진협상은 꿈수, 여야 협상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퇴진일정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탄핵을 피하기 위한 '꿈수'로 규정하면서 여야간 협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 없는 조속한 하야를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요구한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간 협상'에 응

야3당, “탄핵안 2일 처리 위해 최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야3당은 탄핵안 내용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야3당은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협상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

민의원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야3당이 합의된 상태다. 다만 비박계 일부 의견을 녹여야 한다. (비박계와) 접촉해서 필요하면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3당 대표는 또 12월 2일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9일 표결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회견과 만나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2일 처리할 수 있도록 야3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까지 발의하면 (2일 표결이) 가능하다”고 2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대변인은 2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2일까지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일정 생기면 야3당간에 협의하고 어떻게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대변인은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고 물리적 시간이 어렵다면 야3당 대표가 긴밀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할 것”이라고 9일 표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

전여옥, 탄핵 부결되면 “‘평화 시위’ 유지 되겠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표결이 부결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12월 9일에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런 대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굴러갈 수는 있다”며 “그런데 그 때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또 탄핵안을 국회에서 진행시키기 어렵다. 그 때 국민의 그 분노는 과연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로써 그대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탄핵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경고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추진하던 다 공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며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일정을 여야협상으로 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격을 스스로 무너뜨리신 게 아닌가 하는 매우 유감스런 담화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고 한 마디로 지도자다. 지도자라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명확하게 밝혔어야 된다”며 “그런데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말하자면, 개인이라는 이슈하고 비법발을 만들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마지막 실낱같은 권력 유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의 꿈수로 규정했다. /뉴스

9일 탄핵 시 늦어도 내년 8월 초까지 대선 가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늦어도 내년 8월 초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치를 전망이다.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현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고일은 약 6개월 뒤인 내년 6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6월 초에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8월 초까지는 대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현재 선고가 앞당겨지면 대선은 그만큼 더 일찍 실시된다.

탄핵심판 절차와 별도로 최순실 특검의 수사도 병행된다. 박 대통령이 30일 특검으로 임명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내지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가장 120일 간 수사 후 내년 3월 말까지 기소를 마치면 판결 선고는 1심에서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심은 6월말, 2심은 8월말, 3심은 10월말에 선고되는 셈이다. 다만 특검수사기간과 공판일정에 따라 선고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특검 활동기간 동안에는 수사만 받다가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되고 공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6월초 현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이 때부터 1심 공판이 시작될 수 있다. /뉴스



야3당 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 탄핵안 부결 되면? 임시회 열어 재발의 가능

“민심의 역풍으로 국회 마비”... 현실적으로 어렵

국회가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를 회기만 다르다면 같은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임시회와 정기회는 다른 회기이므로 정기회에서 부결된 탄핵안을 임시회에서 재의결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뉴스시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92조가 규정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에 재발의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회기가 다르다면 국회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1(75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열릴 수 있다. 여야 합의 없이도 야권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장이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만큼 12월 9일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 가능성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재의결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야3당의 국회의원은 총 165명(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이다. 여기에 야권성향 무소속 6명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도 172명이다. 야당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번 부결된 안에 대해 여당이 재의결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 야권에서도 탄핵안 부결 이후 절차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임시회를 열어 재의결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안은 당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핵심관계자 역시 “우리는 탄핵안 부결을 가정한 어떤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심의 역풍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같은 강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총발민심이 국회를 그냥 두겠다. 국회 전체의 의사일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국회 자체가 엄청난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열어 탄핵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뉴스

본심 드러낸 친박... “탄핵만은 막아야”

새누리당 친박계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퇴진 일정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 열린 전날 의총과 오늘 오전 열린 의총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당 쇄신 로드맵으로 내년 1월21일 전당대회 개최와 지도부 사퇴를 내댜던 친박계 지도부는 이날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퇴 로드맵도 철회할 것”이라고 비박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만약 박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면 당 지도부도 사퇴할 수 없다”며 “우리가 내걸었던 내년 1월 전당대회와 로드맵도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최고위원 역시 비공개 의총 발언을 통해 탄핵 시 지도부 사퇴 불가, 비상사국위 해체, 탄핵 중단 등을 주장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탄핵 표결 시 찬성하는 의원들은 출당 조치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의 이같은 기류 변화를 두고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친박계의 본심이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뉴스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요금 결제
- 간편 결제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해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